www.president.go.kr

청와대 브리핑

제120호 2003년 8월 20일(수) 대통령 비서실 TEL. 02-770-2544 / FAX. 770-2451

"공권력 앞세운 정치 않겠다"

노 대통령, 북핵 등 국정 현안 강한 해결 의지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세계 한인 지도자 340명을 초청해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방향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며 국정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확립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언 요지.

"참여정부 들어 북한 핵문제가 걱정이었는데, 지금 가는 과정보다 더 좋은 과정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결의의 자세가 이런 상황을 조성했다고 믿는다. 잘 가고 있고 잘 가리라 믿는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옥신각신하고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해결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카드채나 금융불안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꺼번에 수술하면 위험해진다고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외국자본의 증시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증시가 미래의 기대척도라고 하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경기의 흐름이고 소비금융을 너무 많이 일으킨 데다 상당히 많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경제를 교란한 측면이 있다. 언제든지 불경기는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불경기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었다. 경기는 시장원리로 회복되지만 성장잠재력 훼손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했다. 이 문제도 옥신각신하고 하루빨리 해결 못해 국민과 국회의 꾸중을 들었지만 채택방도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대통령선거 때 정당을 매개로 국회를 지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정당과 국회의 질서가 바뀐다고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지배하는 것에는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반대하고 중립과 독립을 요구했다. 그 결과 검찰이 독립하니까 수사의 성역이 없어지고 정치권도 공격을 받자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렇다고 한국의 전체적인 국정질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검찰이 국정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독립과 중립을 지킬 충분한 자질이 있다. 신뢰를 해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기가 대통령인 저도 힘들지만 과도기적 질서로 이해해 나가자. 힘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진짜 국가가 혼란스럽고 위험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위임한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20년 정치를 하면서 원칙을 반드시 지켰다. 이익 때문에 타협해서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제 공권력을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확립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꿔 나가야겠다는 심정을 헤아려달라.

25일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

노 대통령, 5급 이상 공직자와 직접 의사소통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오는 25일 제2차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과의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IT 마인드를 공유하고 열린 국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참여범위도 1차 '인터넷 조회' 때의 중앙부처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넓어져 참여인원은 1,073명에서 총 1만5,000여명으로 늘었다.

이번 온라인 대화는 행정자치부 정부 전산관리소 주관 아래 정부고속망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지난 13일 공직자들이 대통령에게 질의할 수 있는 게시판이 행사 홈페이지에 개설돼 간접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게 됐다.

미디어홍보비서관실은 "이같은 행사가 거듭되면서 이제까지의 '집합식 월례조회'가 사라지고 '온라인 의사소통'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참여인원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혁신 성공 이유 있었다' 등 4면 발행

'지역혁신' 성공 이유 있었다

균형발전위, 국내 사례 수집 완료…성공요인 분석 사례집 10월 발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혁신 사례와 그 성공요인 등을 분석해 이를 적극 전파하기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혁신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도시였던 경기도 부천시는 21세기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 단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또 포항은 포항공대와 포스코, 산업과학연구원이 결합된 하이테크 기반형 지역혁신체제로 발전한다.

■ 부천, 문화콘텐츠산업 단지로 부상

부천시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원미구 상동 일원에 2006년까지 민자 650억원, 지방비 400억원 등 총 1,245억원 이상을 투자해 부천문화산업단지, 부천문화산업아카데미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각각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게임, 캐릭터산업이 유치되고 문화콘텐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부천시는 이미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부천만화축제와 부천만화영상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만화박물관 설립 및 운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등 만화영상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16개 업체 34명의 만화작가가 입주해 창작·제조·팬시용품 제조 및 판매 기능까지 클러스터화해 공동 브랜드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등 지방문화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종합지원시설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도 지난 3월말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경기도와 함께 170억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부천시는 이 지원센터가 주체가 돼 첨단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제작과 연관산업으로 약 200여 업체 3,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성공은 부천시가 부천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5대 문화사업을 통해 형성한 성숙한 문화예술 자원도 그 배경이지만, 무엇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인 'One Source Multi Use' 전략으로 출판만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산업구조가 자체 완결구도를 갖도록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포항, 하이테크 기반 산학연 협력모델

포항의 지역혁신 모델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기술력이 결합된 협력모델. 연구중심 대학과 지역 대기업, 연구소가 연계하는 국내 유일의 하이테크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유형이다.

이를 위해 포항공대와 산업과학연구원을 같은 캠퍼스에 설립했다. 포스코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대학과 기업 엔지니어와의 상호보완적 지식교류와 연구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포스코 현장방문 프로그램'과 산업과학연구원과의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겸직교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과는 상당하다. 포스코는 철강기술의 구조 고도화 및 신사업화 기술개발, 핵심인력 양성 등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포항공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을 첨단 과학도시 및 경북의 산업클러스터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해외 사례도 수집중

포항 산·학·연 협력프로젝트 성공의 요인으로는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한 산·학·연 협력문화 조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 △지역특성화에 부합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추진 등이 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사례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할 예정인 '지역혁신 사례집'에 실릴 예정이다.

사례집은 이미 수집 완료한 국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55개 성공사례와 해외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성과 및 성공요인을 분석해 담게 된다. 해외사례는 전문기관 및 지역혁신 전문위원을 활용해 수집중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사례집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 초안 전문위원회 및 TF팀 논의를 거쳐 10월 중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 외에 지역혁신 이론 및 개념, 총괄정리와 대표사례 요약 등도 담기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민간단체가 8·15 행사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운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이를 둘러싼 첨예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북한의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4대 경협 발표 통지문 교환 등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는 기폭제로 작용했지만, 일부에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남북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체제로 살아오면서 숙명처럼 겪고 있는 한국적 현실이자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비판을 인정한다해도 유감 표명을 "북한의 억지 주장에 한국의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다"(조선일보 8월 20일자 사설) "노 대통령이 보수파를 때리고 친북 세력을 북돋우는 북한 전략에 힘을 실어 준 결과"(중앙일자 8월 20일자 사설) 등으로 해석하고 "이 정부의 대북·대미 인식과 정책이 언제까지 이런 유(類)의 표류를 거듭할 것인지 걱정스럽다"(조선 사설)는 식의 비판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편협하고 무책임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고민을 하등 고려하지 않은 이같은 냉전논리는 설득력도 없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만 끼칠 뿐이다.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결단'이었다. 자칫 '반쪽' 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 분위기로 바꾸기 위한 통과의례의 성격이 강했다.

만에 하나, 북한의 불참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당장 대구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큰 상실감을 겪을 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코앞에 다가온 '6자 회담' 등에 끼칠 악영향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지도자가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실익도 없는 대결논리에 사로잡혀 무작정 대치국면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였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감 표명에 따른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흑백논리의 잣대만을 들이대 '북에 굴복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대안 없이 남북의 불화만 조장하는 아마추어식 접근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피력했다. 19일 대구·경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화합과 관련한 구상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상세하게 지역문제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문제를 고려해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지역문제의 해결책"이라며 별도의 지역감정 해소책은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소외감, 지역갈등, 지역감정 등은 정치인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92년 이전 30년 동안 대구 출신의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가의 자원을 주무를 때 진짜 호남을 소외시켰는가. 인정하시겠는가. 그 30년 동안 대구·경북이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고 덕을 봤는가"라며 "이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제가 민주당인데도 호남에서 호남 푸대접론을 계속 얘기하는데 푸대접론 100번 얘기해도 노무현